



[산업] 현대자동차그룹 G90·팰리세이드 흥행몰이 05



Life

[르포] '年 151만대 생산' 코웨이 충남 유구공장 L2



# 서울시 여성 공무원도 숙직... 형평성 속 기대반 우려반

### 남녀 형평성 도모 취지로 시행 男 66%, 女 53% 숙직제도 찬성 같은 의무에 동등 권리 생겨야 추행·폭행 등 안전 우려도

서울시가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 숙직을 시범 운영한다. 공직사회에서는 남녀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본청은 12월부터 주 2회에 걸쳐 총 8회, 요일을 달리해 남녀 혼합방식으로 숙직을 실시한다. 현재 본관에서 남성 4명, 서소문 별관에서 남성 2명으로 실시하고 있는 숙직을 이달부터 본관은 남성 2명·여성 2명, 서소문 남성 1명·여성 1명 또는 여성 2명으로 구성해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여성 공무원 인원이 많지 않아 남성 공무원들만 숙직을 해왔다"며 "그런데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 넘게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숙직 부담이 가중됐고, 여성들도 숙직을 마다하지 않아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서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의



서울시가 12월부터 본청에서 여성 공무원 숙직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두고 공직 사회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투이미지

63%가 여성 공무원 숙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여성 공무원 숙직 제도에 찬성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이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편견이 사라져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며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는 갖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시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 서

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11만명 중 여성은 3900명으로 35.5%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1698명 중 여성은 397명으로 23.4%에 불과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초현상'은 더 심해졌다. 3급 공무원 31명 중 여성은 4명(12.9%), 2급 공무원 19명 중 여성 0명, 1급 공무원 8명 중 여성은 1명(12.5%)으로 조사됐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성 공무원 숙직

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9급 공무원 이모(29) 씨는 "여성 공무원들은 외부 순찰을 돌 때 특히 더 위험하다.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이유로 여성 공무원 숙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 공무원도 숙직하는 게 양성평등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 5월 여성 전용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 9월 전북에서는 경찰 간부가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경을 추행한 일도 있었다.

같은 달 천안시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 수십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 천안시 신부동 주공2단지 재개발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시청에 찾아가 비인가 조합장 인가를 요구하며 이를 말리던 여성 공무원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퍼부었다.

서울시는 근무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을 고려해 청사 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적이 드물거나 야

심해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하는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직자의 안전·보호장치로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직 근무 요령으로 언어·행동 유의, 남녀 공무원 휴식공간 무단 출입 금지 등을 당직근무 개시와 함께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지난 4월 실시한 '당직 운영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여직원 증가로 남녀 당직 주기 격차가 커지면서 숙직 부담이 커지고 있음 ▲숙직 업무나 근무여건을 볼 때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여직원을 숙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관례답습적 방식으로 현재 여건과 맞지 않음 등을 이유로 여성 공무원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직원들은 ▲야간 민원 응대 시 남직원에 비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남직원에 비해 육아 등으로 숙직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여직원 숙직공간 미비 ▲현재 숙직 운영방식으로도 별다른 문제 없음 등을 이유로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속도 50km 이하로 제한

### 보행자 안전 위해 '안전속도 5030'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도로에서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



서울 도심에 설치된 시속 제한 안내문. /연합뉴스

~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이다.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도 포함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사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이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사망자 비율도 전체

평균인 57%를 크게 웃도는 69% 달했다. 시는 사대문 안은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일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92.6%로 높았다. 주행속도가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중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착공,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 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를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김현정 기자



주말엔 여유있는 9호선 연장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이틀째인 2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석촌역을 지나가는 개화방면 급행열차가 비교적 여유있게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노후경유차 제한으로 초미세먼지 12t 줄여

###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출입 제한 초미세먼지 배출량 하루 34kg 감소

서울시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시 공공물류센터의 출입을 제한한 결과 연간 12t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 고시한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역의 가장 큰 공공물류센터인 가락·강서 시장 출입 차량으로 등록돼 있고, 수도권 지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공공·민간물류센터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총 1895대에 대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하루 34kg 감소, 연간 12t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추가 설치되고 경기, 인천에도 CCTV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돼 전국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1군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폐차 지원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 인천시, 대중교통·친환경 교통수단 늘린다

### 2036년까지 철도망 2.6배 확충 등 도시교통 종합계획안 마련

인천시가 2036년까지 지역 철도망 길이를 현재의 2.6배 수준인 359.16km로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비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종합계획안을 기본지침으로 삼아 향후 20년간 교통계획·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여건·패러다임 변화와 국가·지자체 교통 관련 계획을 반영해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관계 기관·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는 인천 지역 철도망을 2017년 기준 139.28km에서 2036년 359.16km로 2.6배 확충하고, 노선 간 직결운행과 급행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속광역도로망 12개 노선 235km를 신설하고, 기존 5개 노선의 길이는 32.7km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버스 인프라 등을 확충해 대중교통 분담률도 8.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천 서북부터미널(검암) 신설, 남부권터미널(관교) 민간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신설,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이 예정돼 있다.

계획안에는 전기·수소차를 2036년까지 12만대 확대 보급하고, 대중교통카셰어링 등 공유 교통수단에 친환경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인천시는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에 포함된 5개의 법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